

배출 기본부과금 면제점 상향조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와 관련된 기본부과금의 면제점과 농도별 부과계수가 상향조정된다.

또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때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도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중별부과금과 처리부과금에서 처리부과금으로 단일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지난 6월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본부과금의 면제점을 배출허용 기준의 20%미만에서 30%미만으로, 농도별 부과계수도 0.2~0.9에서 0.27~1.08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했을 경우 기본부과금을 지금에 비해 35%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때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도 사업장 규모별로 50만~400만원의 중별부과금과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해 부과했으나 중별부과금을 폐지하고 처리부과금으로 단일화했다.

국가에서 설치, 운영해 온 대기오염측정망의 경우 도시지역의 대기질측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인 오염도 파악은 국가에서 각각 담당하게 되고 국가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이 맡게 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수 있는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되는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환경부는 최근 굴뚝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해 전국의 3천229개 업체 가운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 등을 제외한 2천72개업체에 2005년까지 TMS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율협 EU와 CO2 배출감축협정 체결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승용차 이산화탄소(CO2) 배출감축협정을 체결했다고 지난 7월 2일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은 유럽환경각료이사회가 KAMA와 EU 집행위간 승용차 CO2 배출감축 협상안을 승인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협상의 최종종료까지 EU 집행위의 대한(對韓) 권고문 채택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 국내업계 전체평균 기준 최종 CO2 감축목표치 140g/km로 설정 ▶ 목표 달성연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1년 연기 ▶ 2004년 중간목표치(165-170g/km) 달성 ▶ 120g/km배출 신모델 2000년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출시 ▶ 매년 공동모니터링 실시 등이다.

SKC 환경친화성 라벨용 필름 양산

SKC는 다이옥신 배출우려가 높은 기존의 페트병 라벨용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성 필름을 수원공장에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7월 7일 발표했다.

기존의 페트병 라벨용 필름은 페트병의 소재인 폴리에스테르필름과 성질이 다른 염화비닐(PVC)로 제조돼 재활용시 병에서 떼어내야 했으며 소각시 환경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하는 바람에 오는 2001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SKC는 양산에 들어간 필름이 폴리에스테르필름으로 만들어져 별도의 분리처리가 불필요한데다 소각시 탄소, 수소 등 일반대기 성분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현재 30% 미만인 페트병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SKC 관계자는 현재의 월 100t 생산규모를 연말까지 월 1천t규모로 확대해 연간 7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7개 그린벨트권역 전면 해제된다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진주, 제주, 춘천, 여수, 통영, 진주, 청주권 등 7개 그린벨트 중소도시권역 1천103km²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그린벨트 구역에서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또 서울 은평구 진관내, 외동 등 인구 1천명 이상의 집단 취락지 30여곳도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국토연구원과 임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등 전문 연구진이 마련한 그린벨트 조정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들 연구원의 개신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소정의 여론수렴과 대통령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부의 그린벨트 구역조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이번에 해제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세부지역별로 보존 또는 개발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연구원 등은 인구 성장률과 인구밀도 등을 기초로 14개 그린벨트 권역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중 수도권(1그룹)과 부산권, 대구권(2그룹) 등 2개 그룹은 시가지 확산압력이 크고 국토계획 또는 도시성장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3개 도시권역은 부분해제 지역으로 분류돼 환경평가 등을 통한 해제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시가지 확산압력과 국토계획을 고려, 해제지역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권으로 시가지 확산압력이 있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대도시권인 ▶대전권 ▶마산, 창원, 진해권 ▶울산권 ▶광주권 등 제 3그룹은 지역 형평성과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그린벨트 전면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주권 ▶제주권 ▶춘천권 ▶여수권 ▶통영권 ▶전주권 ▶청주권 등 7개 권역 1천103km²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소도시권으로 시가지 확산이 미미하고 인구성장률이 낮거나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일단 전면 해제가 확실시되고 있다.

연구진은 또 집단 취락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인구5천명 ▶인구 1천명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한의 기초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1천명 이상의 집단취락이 해제대상 지역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당시 동일한 집단취락이 양분돼 구역경계선이 설정돼 있는 취락과 산업단지가 구역안에 있는 창원 양곡지구, 시화공단 배후 취락지 등 특수한 여건의 취락은 이런 인구 요건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제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오염 사고 90% 이상이 인재였다

올 상반기 남해안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의 90% 이상은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4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남해안에서 발생한 45건의 해양오염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어선의 고의적인 폐유배출 22건(49%), 부주의 10건(22%), 해난사고 10건(22%)으로 전체 사고중 42건(93%)이 인위적 요인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한,일어업협정 등의 여파로 어업불황이 계속되면서 장기 정박어선이 늘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정박어선의 침수,침몰사고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가 10건이나 발생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5건에 그쳤던 고의적 폐유배출 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예년에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어업불황 여파로 생계난을 겪는 어민들이 폐유처리까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박 충돌 및 좌초 등 대형 해난사고가 없어 기름유출량은 2천200t에 그쳐 지난해 같은 시기 1만4천470t의 15%에 그쳤다.

해경은 이같은 해양오염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기부터 헬기와 경비정을 동원, 매달 3회 이상 항공감시와 항내 정박어선들의 고의적 폐유배출행위, 운항중 바다오염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업 불황에 따른 장기 정박어선 증가와 관련한 해양오염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강력한 지도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어민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청호 '조류 주의보' 발령 초읽기

대전, 충남.북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조류(藻類)가 급속히 퍼져 '조류 주의보' 발령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금강환경관리청과 금강수질검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대청호의 수질을 측정된 결과, 상류지역인 충북 보은군 회남지점의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각각 15.1mg/m³와 ml당 4천965개로 '주의보'(발령기준: 클로로필-a 농도 15-25mg/m³, 남조류 세포수 ml당 500-5천개)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5일에도 회남지점의 클로로필-a 농도는 12.9mg/m³로 주의보 수준에 육박했으며 남조류 세포수도 ml당 1만6천159개로 주의보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조류 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주의보 발령기준에 연속 2차례 해당하면 발령되는데 이럴 경우 독성(毒性)을 가지고 있는 조류의 특성 때문에 수돗물에 염소량 투입을 늘리는 등 정수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취수탑에 가까운 충북 청원군 문이지점과 대전시 동구 추동지점의 남조류 세포수는 각각 ml당 226개와 30개로 주의보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강한 햇빛과 섭씨 25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될 경우 조류의 급속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금강환경관리청은 이날 오후 대전시공무원교육원에서 대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청호 수질관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고 조류 확산을 막는데 해당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조류 발생기간은 96년 84일, 97년 7일, 작년 31일 등이었다.

이남 국제환경박람회를 신안장으로

경기도 하남시와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국내 환경기술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 환경외교 강화 등을 목표로 오는 9월 21일부터 경기 하남시 한강 올림픽 조정.카누경기장에서 한달간 개최하는 '99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지난 7월 19일 밝혔다.

이 박람회가 팔당상수원 인근에서 열리는데다 세계 각국에서 150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박람회 개최로 자칫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 오.폐수 처리 대책 ▲ 폐기물 처리대책 ▲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거나 시행중이다.

한강 수질오염을 막기위한 오.폐수 처리대책으로는 3억 3천만원을 투입해 상수관로와 하수관로를 각각 1천m 확충,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 처리할 계획이다.

폐기물은 하남시가 직접 분리수거에 나서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의 억제를 유도키로 했다.

또 청정연료를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자전거 5천여대를 비치해 관람객들에게 이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원봉사자 1천여명을 동원해 취사, 방노, 오물투기 등의 감시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날로 악화되는 환경오염을 막고 낙후돼 있는 국내 환경기술을 미래전략 수출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행사인 만큼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환경보전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